

[국어 산책]

한국어와 민족정신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교수님. 입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교양국어 시간에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명색이 국문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써도 되느냐는 질책에 가까웠다. 어떤 맥락에서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학생의 어투로 봐서 내가 수업 도중에 ‘입장’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았다.

“내가 그런 말을 썼었니?”

되물어 보는 내 모습이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한다, 저렇게 써야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잔소리만 하던 교수에게 치명타를 날렸다고 판단한 학생은 그야말로 득의 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국어 사전에서 ‘입장’이라는 단어를 찾으려면, 금성 국어대사전을 제외하고는 ‘처지’로 순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뜻풀이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우리말 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모든 인터넷 사전), 뜻풀이는 되어 있으나 일본식 한자어라는 설명이 첨부되어(연세 한국어사전) 있거나, 아예 표

제어에서 빼버렸으니(조선말 대사전), 글쓰기 교육을 하는 국어 선생으로서
는 변명하기가 용색한 상황이었다.

‘입장(立場)’을 ‘처지(處地)’로 정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1948년에 나온 『
우리말 도로찾기』에 나타난다.

『우리말 도로찾기』는 해방 후 국어 순화 운동을 추진하는 데 전범(典
範)이 되어 온 것이다. 1946년 6월 당시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일본말을 우
리말로, 일어식 한자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정화할 방침을 세우고, 938개의
일본어를 일소하기 위한 정화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어정화위원회에서
편수국안을 심의하고 1948년 1월 12일 확정하여 46판 36면의 팸플릿으로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이 책자가 『우리말 도로찾기』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본식 한자어라고 지적한 한자어 중 상당수가 중국 한
어(漢語)에 있던 것(結婚, 曖昧 등)이거나 한어에 수용된 일어계 한자어
(立場, 手續 등)이다. 그렇다면 일본식 한자어의 범위 그리고 정리해야 할
한자어를 정하는 기준 등이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
제에 대해서는 이미 6년 전인 1997년 김민수 교수가 『새국어생활』 7-1호에
실린 「한자어 정책의 문제와 전환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거론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적 어휘’가 된 한자어는 자연도태에 맡기고, ‘외래적
한자어’만을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정리 대상이 되는 ‘외래적 한자
어’는 일본 한자어이지만, 일본 한자어 중에서 한어계 한자어, 중국에서 수
용한 외래한어, 귀화어와 근대용어 등은 한중, 한일의 국제적 공통성을 살
리자는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정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른다면 ‘입장(立場), 수속(手續), 입구(入口), 취소(取消),
관점(觀點), 기분(氣分)’ 등과 같이 한어에 수용된 일어계 한자어나, ‘적자
(赤字), 원주(圓周), 하숙(下宿), 회람(回覽)’ 등과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어계 한자어는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은 아니다. 즉, 중국에서
도 사용하고 일본에서도 사용하는 한자어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 기원이 일본 한자어라 할지라도 굳이 정화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97년의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면 한자어에 대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고, 한·중·일 한자어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자어 정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 관리들은 매몰현장에서 34구의 사체가 발굴됐으며 47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3. 5. 19 한겨레신문)

- 경찰은 사체의 부패정도와 숨진 곱씨가 지난해 12월 초순 오빠에게 유서와 소지품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소식이 끊어진 것으로 미뤄...」

(2003. 5. 19 한겨레신문)

- 윤씨는 지난 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2003. 5. 30 한겨레신문)

위의 기사문은 한자어에 대한 연구와 한자어 정리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위의 기사문에 사용된 ‘사체(死體)’라는 한자어는 대용자(代用字)를 사용한 한자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한자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용자(代用字)는 일본 혹은 중국의 자체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의 언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체(死體)’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한자어인데, 이는 ‘시체(屍體)’의 ‘시(屍)’ 대용자로 ‘사(死)’를 정한 데에서 연유했다. 이 단어는 순전히 일본의 한자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1981년 10월부터 1945자의 상용한자(常用漢字)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48년 2월부터 사용한 ‘당용한자(當用漢字)’에 95자를 추가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용한자에 들지 않는 한자를 포함하는 한자어는 일부 고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칙은 같은 음을 갖고 의미상 관련된다면 상용한자로 바꾸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학 용어 함수(函數)의 함(函)이 상용한자에 없기 때문에 이를 관수(關數)로 바꾸었는데, 일본 한자음으로는 함(函)과 관(關)이 동일한 음이고, 의미상으로도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한자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어는 굴삭(掘削), 고양(高揚), 사체(死體) 등이 있는데, 이들과 대응하는 원래 한자어는 굴착(掘鑿), 양양(昂揚), 시체(屍體) 등이다. 그런데 일본 한자음으로는 이들이 동일한 음이기 때문에 상용한자에 있는 한자로 바꾼 掘削, 高揚, 死體 등의 한자어가 일본어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자음으로는 이들 음이 전혀 다른 음이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일본에서는 편리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편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선택일 뿐이다.

대용자를 사용하여 기존 단어를 바꾼 예는 중국의 한자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또한 중국 한자어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인 만큼 이를 우리가 따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용자가 사용된 중국 한자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용자가 사용된 일본의 한자어는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삼국에서 관습화되어 쓰이는 한자어와 자국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 대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대용자가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언어적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적 관점을 갖춘 한자어 정책이 필요하다.

3

한자어보다 더 어렵고 난감한 질문은 이것이 일본식 표현이나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의’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는 것이다’가 일본식 표현인가요?”, “-에 있어서’가 일본말인가요?”, “그녀’그녀’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인가요?”, “피동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등에 이르기까지 질문 대상도 다양하고 질문자의 표현도 다양하기만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일본 표현인지 아닌지 그 근거가 불확실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한국식 표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말의 문체가 한문 문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진행된 대대적인 역경(譯經) 작업은 자연스럽게 우리말 문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부녀자의 편지글 또한 한문 문체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는 당시 보편적 표현 양식이 한문 문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한국식 문체라는 게 별도로 존재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본식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나라의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일본식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말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법에 따른 표현을 일본식 표현으로 환원시켜 보면서 문체삼는 것은 사실 관계를 떠나 문체의 영향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 천 년 동안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왔을 공통성과 서로의 영향 관계를 통째로 거부하는 것은 외래 문화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문체는 글의 표현 양식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다양한 생각은 다양한 문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글쓴이로서는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얼마나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글의 표현 방법을 다듬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피동 표현이 외래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피동 표현이 우리말 표현의 한 부분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글쓰기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글에서 피동 표현은 자연스럽게 그 글의 문체적 특징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식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 모든 표현을 이분시켜 놓고 정체가 모호한 한국식 문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조악(粗惡)하고 비문법적인 문장들이다. 이러한 문장들이야말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4

우리 언어 생활에서 외래 요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래 요소가 우리말의 소통 질서를 교란시킬 때이다. 그렇다면 외래 요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말의 소통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외래 요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정리를 위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순수한 우리말 찾기’를 목적으로 한 외래 요소의 정리는 ‘소통의 질서’라는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언어 정책과 언어 교육이 진정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 내에서의 우리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말의 소통 문제는 사회적 의사 소통의 민주화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난해한 법률문은 법을 매개로 기생하는 권력 집단의 독점권을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 될 뿐이고, 텍스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서류와 서식은 정보의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료 집단의 권위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법률문과 행정 공문의 비민주적 표현 방식이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정책적 접근은 외래 요소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 소통을 민주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자 병용 문제나 영어 공용화 문제 또한 사회적 의사 소통을 민주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 보다 합리적인 언어 정책의 기

준이 마련될 것이다.

언어 문제에 민족 정신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민족 정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사회는 국수주의적 파시스트가 기생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며, 이는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족 정신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 민족 정신이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때뿐이다.